

거대한 국가의 절멸된 공동체, 그리고 홀로 선 개인들

김 옥 선*

차 례

- | | |
|--------------------------------|--------------------------------|
| 1. 공동체 부재의 시대, ‘나 홀로’ 선
사람들 | 4. 시민 공동체 의식 형성, 민주·자유
· 평등 |
| 2. 현실 통치 단위로서 ‘마을 공동체’ | 5. 시민의 종언과 파편화된 개인 |
| 3. 권위적 국가의 국민 공동체 생산 | |

국문초록

정치적 사안을 둘러싸고 의사표명을 위해 같은 공간을 점유한 개인들을 우리는 민중, 시민이라 불러왔다. 2016년 겨울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시점에 이를 회복하기 위해 거리로 나온 사람은 ‘주권자’이다. 이들을 통해 우리 사회는 현재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주체를 기대하고 있다.

광장에 나온 새로운 주체는 그간 삼포·오포라 불린 ‘소외된 대중’이었다. 촛불의 힘이 국민의 승리라는 한국 민주주의사상 큰 성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주체로서 주권자는 곧바로 국가와 직면하는, 신자유주의

* 경성대학교

적 체제 전환 이후 과편화되어 온 개인들이다. 이제 우리는 생존과 관련한 기본권을 요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대하기보다 국가에 바로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 해결의 최종 종착점이 국가인 것은 지역 현안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오직 개인으로서만 국가에 요구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개인의 삶의 버팀목이 되어온 공동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체는 개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국가적 폭력을 방어하고 개인을 보호하는 보루로서, 혹은 개인의 일상이 순식간에 전환되는 시점에서 조차 삶의 근거, 가치로서 작용한다.

나는 누구와 나의 삶을 혹은 문제를 이야기할 것인가. 즉 개인의 입장을 정치적으로 공론화 할 수 있는 장을 회복해야 필요성은 우리가 촛불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를 기대하고 열망하는 지금에 더욱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우리 사회의 공동체가 절멸되어 버린 상황을 국가 권력이 개인, 자치 조직을 통제·통치해 온 역사적 과정을 통해 살피보고자 한다.

요약하면 국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의 일상에 개입해 통제·통치해 왔다. ‘홀로 된 개인’은 개인의 생존을 주변 이웃과 함께 공론화, 해결할 수 있는 장을 국가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오늘날에 이르러 촛불 주체는 국가가 개인을 통치하는 과정에서 탄생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이제 혼자 광장에 나와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이 개인들로부터 새로운 공동체를 상상해야 할 지점에 서 있다.

주제어 : 개인, 공동체, 시민, 국가, 권위주의 국가, 신자유주의, 순수 개인

1. 공동체 부재의 시대, ‘나 홀로’ 선 사람들

2016년 겨울. 전국의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몇몇 개인의 사리사욕에 의해 국가 기구가 동원된 어처구니없는 상황에서 ‘이것이 나라냐’고 외쳤다. 여기에는 세월호를 위시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국민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국가가 왜 국민의 죽음을 방치하는가라는 ‘국가 실종’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 ‘체대로 된 국가’에 대한 열망은 무능한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이어졌고, 이를 가능하게 만든 ‘촛불의 힘’을 두고 사람들은 시민혁명으로, 가까이서 87년 6월 항쟁, 4·19혁명, 멀리서 동학혁명에서 그 힘의 뿌리를 찾는다.

정치적 사안을 둘러싸고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같은 공간을 점유한 ‘개인들’을 우리는 ‘민중’, ‘시민’으로 불러 그 공동의 정체성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번 시위에서는 ‘주권자’가 등장했다.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시점에 이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기본권의 주체이자 의무의 주체인 ‘개개인의 권리 실천’인 것이다. 이들을 통해 우리 사회는 현재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주체를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주체’라는 의미는 전국의 광장을 채운 깃발의 성격 때문이다. 광장에는 정치적 상황을 회화화한 깃발은 물론 장수풍뎅이 연구회, 트잉여운동연합, 민주묘충, 혼자 온 사람들, 일 못하는 사람, 전전련 등과 같은 깃발로 채워져 시위의 축제적 성격이 더욱 두드러졌다. 그러나 광장을 채운 화려한 깃발 뒤에는 그간 삼포·오포·n포세대라 불린 ‘소외된 대중’, ‘을’들의 비애감과 비장미가 담겨있다.¹⁾ 순수하게 ‘나 홀로’ 존재했던 개인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것이다. 촛불의 힘이 국민의 승리라는 한국 민주주의사상 큰 성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주체로서 주권자는 그들의 생존과 관련한 기본권을 요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대하기

1) 김성일, 『광장정치의 동학』, 『문화과학』 89호, 문화과학사, 2017, 164쪽.

보다 신자유주의적 체제 전환 이후 파편화되어 온 개인들이다. 이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고민과 문제를 홀로 감당해야 했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1인 시위를 벌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문제 해결의 최종 종착점이 국가인 것은 지역 현안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현안의 경중을 떠나 우리는 왜 이토록 국가의 해결력만을 기대하는가. 한국의 근대적 자본주의화가 국가의 강력한 통제 하에서 지역을 재편성해 온 것을 상기하면 이 상황은 그리 낯설지 않다. 하지만 공동체는 개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국가적 폭력을 방어하고 개인을 보호하는 보루로서, 혹은 개인의 일상이 순식간에 전환되는 시점에서 조차 삶의 근거, 가치로서 작용한다. 오직 개인으로서만 국가에 요구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개인의 삶의 버팀목이 되어온 공동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누구와 나의 삶을 혹은 문제를 이야기할 것인가.’ 즉 개인의 입장을 정치적으로 공론화 할 수 있는 장을 회복해야 필요성은 우리가 촛불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를 기대하고 열망하는 지금에 더욱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우리 사회의 공동체가 절멸되어 버린 상황을 국가의 개인 또는 개인들의 자치조직을 통치, 통제하는 과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의 근대화 과정은 마을·지역·생활 공동체의 의사결정력, 자치 역량을 분쇄하고 국가의 명령체계가 개인의 일상에 효율적으로 침투될 수 있는 조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전통 사회의 마을 공동체는 신분을 중심으로 서로의 필요에 따른 생활공동체이다. 일제는 이 자율적인 조직을 국가제도로 전환하며 권력 내부로 포섭했다. 마을 공동조직의 윤리, 가치 규범은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도 도시 외곽 변두리 공동체에서 그 명맥을 유지했다. 근대적 행정, 교육, 매체와 같은 제도는 통해 ‘개인’을 호출하며 ‘국민적 공동체’를 형성했다. 그러나 이 국민적 공동체를 생산해 낸 제도로부터 ‘시민 공동체’

는 탄생했다. 국가의 이익이 개인이나 공동의 이익에 기능하지 못할 때 그들은 국가와 불화한 것이다. 그러나 곧 이어진 경제 위기, 신자유주의적 축적 체제 전환에 따라 공동의 해결력을 잃고 흩어진 개인들, 그들의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남은 가족, 그 사이 공동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렇듯 국가는 정치적·경제적 토대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일상에 개입해 통제·통치해 왔다. 그 사이에 개인 간의 관계망으로서 마을, 지역 공동체 역시 변화해 왔다. 국가 권력에 대응하여 개인들 역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며 결속해 온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결속은 또다시 국가 권력에 의해 포섭되는 과정을 반복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권력의 통제와 이에 대응한 개인들의 결속력을 역사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오늘날 ‘개인’의 역사적 맥락을 구성해 본 것이다.

오늘날 ‘개인’은 자신의 생존 문제를 주변 이웃과 함께 공론화, 해결할 수 있는 장을 국가가 ‘국민 공동체’로 포섭, 국가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민중’, ‘시민’은 공동체를 국가가 일방적으로 독점하는 데 저항한 공동체이다.²⁾ 그러나 오늘날 광장에 선 ‘홀로 된 개인’, 촛불의 주체는 과거 혁명을 주도했던 소수 지식인 그룹과는 다른 사람이다. 그리고 이번 광장에는 가족 단위의 시위자가 대거 참여했다. 이 또한 일상과 괴리된 채 이념적 정당성을 위해 투쟁했던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제 우리는 혼자 광장에 나와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이 개인들로부터 새로운 공동체를 상상해야 할 지점에 서 있다.

2) ‘국민’, ‘민중’, ‘시민’ 개념은 한국 사회에서 그 정의, 출현, 의의 등 아직 첨예하게 논쟁 중이다. 본고에서는 그 개념의 첨예함보다 각 시기에 정치적 주체로서 국민, 시민, 민중을 사용하였다. ‘국민’은 국가에 속한 개인의 의무와 충성을 제공하는 집단적 주체성을, ‘민중’은 국가적 제도를 통해 탄생한 개인의 저항적 주체성이 드러난 개념이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는 국민, 민중, 시민이라는 고정된 정체성이 아니라 ‘홀로 선 개인’이 보여준 ‘함께 있음’, 여러 정체성들 ‘사이’에 존재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2. 현실 통치 단위로서 ‘마을 공동체’

알다시피 ‘개인’은 근대사회의 출현에 따라 탄생한 것이다.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독립적 존재로서의 ‘나’는 자율성과 함께 개인이 수행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이다.³⁾ 이전의 삶이 계급과 신분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가치가 ‘주어진’ 데 비해 근대사회의 개인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구성하고 결정하면서 가치를 구현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근대사회에서 개인은 집단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계급(계층), 가족 등 제도를 통해 개인은 사회적으로 통합된 존재이다. 국가 제도를 통해 근대적 개인으로서의 자율과 책임이 부여되지 않았던 조선사회, 이어 일제강점기의 통치 단위는 마을이다. 더 정확하게는 국가적 권력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공동조직을 통치의 기본으로 포섭한 것이다.

다양한 종류의 계, 동계, 집단적인 오락행사, 두레 등은 공생을 위해 마을 주민들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와 관습이다. 노동, 경제적 목적에 따라 조직된 조직은 마을을 생활공동체로 결속시키는 데 일정하게 작용했고 마을 차원의 질서와 윤리, 규범을 만들어 유지해 온 것이다. 마을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었던 데에는 사족층의 역할이 있다.⁴⁾ 흔히 전통적 사회의 신분 질서를 권력 관계로 이해하는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농촌사회에서 ‘마을’은 계급, 신분의 일방적인 권력관계가 아니라 양반의 지배력과 농민의 생산 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공동의 공간이었다. 양반 지주 계급은 노동력으로서 농민이, 농민은 농

3) 바우만에 의하면 ‘개인’화는 주어진 것이 아닌 하나의 과제이다. 그 과제를 수행할 책임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행위자에 지우는 것이다. 지그문트 바우만, 이일수 옮김, 『액체근대』, 강, 2009, 53쪽

4) 사족층은 중앙 정부를 상대로 국가정책과 지방행정의 불합리를 규탄하고 지방관리의 부정부패를 고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었다. 또한 성리학적인 향촌질서와 생활문화를 보급, 확대했으며 병작제, 환곡 등으로 마을의 경제적 위기에 주민들의 울타리가 되었다. 김무진 외, 『한국 전통사회의 의사소통체계와 마을 문화』, 계명대학교출판부, 2006, 191쪽~192쪽.

사지를 땅이라는 공동의 필요에 의한 보다 느슨하고 자율적인 성격으로 생활 공동조직은 국가와 대면하기 전 개인의 삶의 가치를 결정짓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었다.

일제는 식민지배,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자율·자치적으로 운영되어 온 마을 공동 조직을 재편했다. 그 제도가 토지조사사업과 면제 시행이다. 1910년 8월부터 시행된 토지조사사업은 봉건 사회의 근간이 되는 토지 관리를 통해 ‘개인’을 문서화 했다. 선각 지식인들이 백성을 계몽의 대상으로 보고 개념적, 추상적인 ‘개인’관념을 주지시킨 것에 비해 토지조사사업은 보다 현실적인 조치였다. 그러나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로서 지주제는 신분질서가 더욱 공고해지고 기존의 상부상조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⁵⁾ 전통적 사회에서는 지주라 하더라도 소작권을 함부로 할 수 없었지만 이제 지주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소작농을 바꿀 수 있게 되었다. 지주와 소작농의 권력관계는 주민들 사이에서 경쟁을 부추겼고 이 과정에서 호혜적 관계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일본 메이지 정부가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봉건제 질서의 중심인 막부체제를 청산하고 ‘동등한’ 신분의 국민으로서 ‘평등한’ 조세를 실현했던 데⁶⁾ 비해 조선에서 토지조

5) 토지조사사업 홍보 책자는 사업의 목적은 개인의 토지소유권을 확인하여 토지 개량·이용을 원만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 소유권을 확정하는 문제에서는 지주, 농민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조치였는데 조선사회에서 토지 소유자는 그리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한 토지를 둘러싸고 적어도 두 계층이 존재하는데, 농민들은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를 경작하면서 조세를 납부했고, 지주는 이들에게서 소작료를 징수해 왔다. 토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하는 사람이 다른 것 외에도 토지는 국유지, 혹은 씨족 및 문중, 촌락공동소유이기에 개인소유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6) 메이지 정부는 번을 모두 폐지하여 260년 간 지속되었던 정치질서를 해체했다. 통합적 국가 정책을 위해 신정부는 번주를 설득하여 영지를 천황에게 자발적으로 반납하도록 했다(판적봉환령). 다이묘는 영지를 반납하고 번지사가 되었지만 과거와 상당한 자치를 유지했다. 다이묘를 완전히 폐지하기 위해 메이지 개혁가들은 모든 번을 폐지하고 현(縣)으로 대체했으며 현지사는 중앙정부가 임명했다(폐번치현).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번을 현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번의 토지에서 세금을 징수하게 된 대개혁이다. 판적봉환령, 폐번치현 변혁 과정

사사업의 결과는 농민으로부터 토지를 분리시켰다.

토지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인 양반의 향촌에 대한 권위를 유지하도록 했지만 동시에 면제를 실시함으로써 양반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관중심의 위계구조를 구축하였다. 이로써 면은 촌락을 포섭하는 말단 행정기관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⁷⁾ 일제가 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시·전달하고 통치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개인이 아니라 이 마을과 부락이었던 것은 1930년대 말부터 일제가 총동원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전쟁에 필요한 인적·물적 동원 정책에서도 확인되는 바이다.

- ① 1937년 12월경 피해자는 마을할당을 채우기 위해 동장에 의해 일본 후쿠시마 어느 탄광으로 강제 동원
- ② 1937년 3월 백형 대신에 동원
- ③ 1939년 3월경 창기면 면서기 조영출에 의해 강제 동원
- ④ 피해자 동생이 동원 대상자였지만 도피함. 일본경찰이 본인을 지서에 연행하여 고문과 폭행을 함. 결국 피해자가 동생 대신 징용을 감.
- ⑤ 1944년 1월 아픈 부친을 대신하여 노무자로 강제동원.
- ⑥ 남하1동에서 노무자 3명이 할당되었는데 구장은 같은 성씨 사람 하나도 안 보내고 타성(他姓)사람만 보냄.
- ⑦ 남의 머슴 산다고, 그런 사람이 끌려가고, 만만한 사람만 끌려가는 거예요. 동네 이장이 그런 사람들 만만하니까 잡아가는 거야.⁸⁾

에서 사무라이의 특권도 폐지되자 나머지 주민에 대한 형식적 규제도 종결된다. 경멸적인 뜻을 담고 있는 에타와 히닌 같은 용어는 부락주민(部落民, 마을사람)으로 대체되었다. 앤드루 고든, 김우영 외 옮김, 『현대 일본의 역사 1』, 이산, 2015, 132쪽~138쪽.

- 7) 일제의 군 폐합은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40방리(方里)의 면적과 1만 명 인구라는 균일한 기준에 맞추어 단행되었다고 한다. 면적과 인구라는 단일한 기준을 적용해 균일한 공간을 만들어낸 것도 놀랍지만 더 주목할 것은 군 통폐합이 면 및 동리의 통폐합과 연계되어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군의 폐합으로 인해 초래되는 ‘공간의 양적 균일성’은 면과 촌락의 폐합이 가져오는 효과와 맞물려 서구 근대적 공간관을 수용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히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윤해동, 앞의 책, 106쪽.

1938년 전국에 걸쳐 각 동리 당 한 명씩 조사원을 투입해 각 군·면·동·리까지 동원 가능한 인력을 남, 여, 연령별로 면밀히 실지조사를 했고 1939년부터 농촌에서 노동력을 ‘모집’한다. 그 모집의 방식이라는 것이 노동자가 필요한 기업이 노동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총독부는 노무조정계획을 수립해 도별로 동원해야할 인원수와 기간을 결정해 각 도에 하달했고 도에서는 각 부·군에 할당 인원을 통지하는 것이다. 동원은 각 지방 유지의 도움으로 진행되었으며 마을 주민들은 ‘공평하게 한 집에 한 명씩은 동원 되어야 한다’는 의무감이 주입되면서 ‘우리집에서도 누군가는 가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한다.⁹⁾ ‘하달된 할당수’라는 동원 방법은 징용영장이 본인이 아니라도 가족이나 마을공동체 내에서 누구든지 그 수를 채우면 되는 것이었다.

신분을 중심으로 한 생활공동체¹⁰⁾가 굳건한 가운데 관(官)정책 수행, 특히 일제는 토지조사사업, 강제 동원과 같은 국책사업에서 개인이라는 주체를 각성시키는 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일상적인 ‘마을 공동체’ 조직을 통제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통치했다. 해방 후 미군정의 통치는 일제의 행정체제를 유지하였고 한국전쟁 시기에도 일제의 주민 통치, 통제 방식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마을, 지역 중심의 통제 체제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난민 대책과정에 효율적으로 대처했다. 개전 초기 정부와 경찰 조직은 대거 이동해오는 피난민에 대응하지 못했지만 지방에서는

8) 강필구, 『일제전시체제가 조선인 강제동원 실태 분석』, 계명대 석사학위 논문, 2013, 20쪽~27쪽.

9) 표영수, 『일제강점기 육군특별지원병제도와 조선인 강제동원』, 『한국민족운동사 연구』 제79집, 2014, 122쪽~123쪽에서 재인용.

10) 저자는 두레, 품앗이 같은 공동노동이 쇠퇴한 이유를 한국사회의 변화에서 찾는다. 해방 후 농지가 경작자 우선으로 분배되고 토지소유권이 소작인에게 이전되면서 지주/소작, 마름/소작관계가 해소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토지경작자인 지주와 마름의 경제적 강제가 사라진 이후 대경작자는 품값을 지불하고 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오창현, 『한국농촌공동체의 구성원리』, 서울대석사학위 논문, 2005.

지방 행정기관과 사회단체, 지역 유지가 중심이 되어 대처했다. 피난민을 수용하고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출신지역을 단위로 이루어진 것까지 감안하면 국가의 행정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을 때 마을의 공동생활조직은 개인 삶의 경제적·도덕적 토대였다.

3. 권위적 국가의 국민 공동체 생산

국가 통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곳에서 개인의 일상을 조정하며 삶의 토대가 된 공동생활조직의 활력을 박태순은 ‘독가촌’에서 찾았다. 독가촌은 해방, 전쟁, 산업화 과정에서 부유했던 사람들의 최종 종착지이다. 독가촌에 모여든 사람들은 ‘시골에서 건디지 못하여 서울로 올라갔지만 서울에서도 맨 몸쓸 변두리로만 굴러다닌 사람’, ‘경제개발계획·국토건설계획에 따라 황무지 개간에 자원한 사람’, ‘고향이 수몰지구가 되어 집단 이주해 온 사람’으로 ‘허명두’와 ‘온씨’ 역시 그들 중 한 사람이다. 거의 버려지다시피한 독가촌이 세상의 관심을 모으게 된 것은 개척자들에 의해 독가촌이 살 만한 땅이 되자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재벌기업 때문이다. 재벌기업은 독가촌을 싼 값에 사들이기 위해 이전 시대 지주제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려고 한다. 이에 두 인물, 허명두와 온씨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응한다.

땀 흘려 가꾼 땅이 도시의 온갖 잡것들이 논다니를 치는 관광지로 되려는 것을 어찌 귀농 개척자들이 가만 보고만 있을 것인가. 하지만 그런 사리만을 가지고는 모자라는 것이 현실인 것이고, 그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 놓고 있는 게 무엇이겠느냐를 따져 보면서 허명두 씨는 웃음을 짓는 것이었다. 대한청년단 시절의 일하며 화랑동지회의 체험들을 그가 요근래 부쩍 회상해 보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명분보다는 실리(實利)를 추구해 오는 측이 항상 이겨 오고 있었던 게 아닌가. 온씨가 찾아와서

자신에게 하였던 말을 그가 곰곰 생각해 보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이제 당신 같은 사람들이 날뛰던 시대는 서서히 지나가고 있다’는 말을 그는 물론 실감으로 받아들이고는 있으나, 문제는 그것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지나간 게 아니라는 데 있었다. 그러니 그가 해야 할 일이 아직은 남아 있는 셈이었다.

— 박태순, 『독가촌풍경』(1977), 208쪽~209쪽.

허명두와 같이 재빠른 사람들은 나중에 불하받을 것을 생각해 지금의 무허가 주택을 사들이고, 마을 사람들 역시 집을 팔지 말지를 고민하기 시작한다. 온씨는 ‘독가촌 개발자활단’이라는 단체 명의로 하여 소유를 함부로 변경시킬 수 없도록 만들고, 수확한 채소를 팔아 수입을 늘리면서 농촌 공동체 운동을 벌이며 유력자와 싸운다. 그러나 허명두가 보기에 개척민들이 주인이 되기에 그들은 너무 약하고 요원한 일이다. 그에 비해 땅을 빼앗으려는 무리는 현실이라면서 자신을 위로한다. 허명두는 풍작이 들어 활기찬 마을에서 유일하게 폭음을 하고 초조, 불안해한다.

이 시대는 개척민이 일구어놓은 땅을 기업과 국가가 ‘합법적’으로 탈취했던 시대이다. 한편 땅을 빼기 위해 ‘날뛰는’ 허명두가 자기 위로를 필요로 할 만큼 양심의 흔들림이 동시에 존재하는 시대이다. 매일 밤 모여든 마을 주민들에 의해 곤욕을 치르는 허명두가 있는 것은, 적어도 독가촌 공동체 내에서 부당한 일을 주민들이 응징할 수 있는 자율성, 판단의 건강함이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다. 허명두는 사리사욕을 추구하면서도 이들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는 허명두를 비롯해 마을 주민들 사이에 윤리 규범을 공유하고 이에 의해 자치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독가촌의 활력은 공생을 위한 공동의 제도와 마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윤리, 규범을 스스로 조직한 데 있다. 이는 그들이 도시적 삶의 양식이 아닌 여전히 전통적 삶의 습속을 따르고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도덕적 판단력과 자율성은 그들이 권위주의 국가 권력의 언저리에 위치해 있고 국민으로부터 밀려나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전

통적 마을 공동체를 유지하는 토지로부터 이탈된 ‘자유로운 개인’은 권위주의 국가의 제도에 의해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받았다.

박정희 정권은 근대적 제도를 통해¹¹⁾ 국민을 구성하며 국민 대중의 시대를 열었다. 국민 대중, 대중사회는 여러 측면에서 논의 가능하겠지만 우선 농본위사회의 신분제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개인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 제도가 주민등록 제도이다. 주민등록증이 나오기 위해서는 ‘나’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하다. 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하는 절차는 이전의 전시동원체제에서 ‘형·동생 대신’, ‘병든 아버지 대신’이 아니라 ‘나’라는 개인의 독립적인 인식이 없고서는 불가능하다. 또한 박정희는 시정연설에서 미국의 민주주의, 그 절차로 ‘국민의 한 표’를 강조했는데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선거를 할 수 없음을 주지시켰다. 주민등록증은 평등한 ‘한 표’로서 ‘타성(他姓)이라서’, ‘머슴 출신이라 만만해서’ 등 신분적 차별과 불평등을 불식시키는 것이었다.

전통적 신분질서를 토대로 한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정체성, 가치를 부여받았던 사람들은 그 질서를 가능케 한 토지를 떠나 도시로 나와 자유로운 개인되었다. 자유로운 개인의 안전과 평안을 책임지는 것은 이제 오직 국가밖에 없다. 국가 제도는 개인적 차이를 조절하면서 국민을 형성한다. 국가의 거대화, 공동의 국민적 정체성은 이전의 마을공동조직에

11) 이 시기에 구축된 제도들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인의 일상에 감시와 통제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다. 1962년에는 주민등록법이 제정되었고, 경제개발에 따른 내자 동원을 위한, 현재의 역진적 조세구조 역시 이때부터 체계화되었다. 또한 이승만 정권부터 그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시행하지 못했던 의무교육을 위해 혁신적으로 교육 시설이 확충되었다. 1963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한 의료보험이 단계적으로 실시되었으며 국가 안보를 위해 군사동원을 가능케 한 향토예비군과 민방위대를 창설된 것도 1968년, 1975년이다. 농촌 살리기 운동에서 전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된 새마을 운동이 시작된 것은 1973년이다. 또한 이 해에는 국민의 호화·사치·과소비 풍조를 단속하고 건전한 생활양식을 위해 처벌조항을 강화한 가정의례준칙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서 행해지는 상호부조, 주민자치조직을 와해시키고 이를 국가제도로 편입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물론 박정희 정권도 서로 돕는 미덕을 훌륭한 덕목으로 장려하고 불우 이웃을 돕는 일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전 사회와 다른 점은 그 불우 이웃을 돕는 방식이 국가기관을 경유함으로써만 가능하다는 것이다.¹²⁾

경제성장과 빈곤해소를 혁명공약으로 내건 박정희 정권은 “민생고의 시급한 해결”을 추진하였으나 반공을 국시로 군사·원호관련 복지를 가장 먼저 추진하였을 뿐 “선성장·후분배”라는 경제 정책으로 인해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는 실질적으로 가장 후면으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었다.¹³⁾ 이런 상황에서 불우이웃돕기의 국가기구화는 복지제도, 복지기금을 마련하는 것까지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이는 두 측면에서 이전과는 다른 삶의 양식을 초래했다. 하나는 절대적 빈곤 상태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공공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자기 주변 이웃의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즉 국가화된 상부상조는 이웃돕기의 자발적 성격을 사라지게 했고, 제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주고받을 사람을 찾을 수 없게 만들었다. 개인은 오직 국가의 충실한 국민으로서 국가에 복무할 때 안전을 보장받을

12) 1975년 보사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이웃돕기전개방안에 따르면 행정기관, 언론기관, 국영기업체, 금융기관과 기타사회단체가 이웃돕기운동을 주도, 체계적이고 실효 있는 이웃돕기운동을 벌이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군·구와 읍·면·동에 이웃돕기창구를 설치운영하고 각 행정기관과 국영기업체 등은 기관단위로 기관이 이웃돕기창구를 설치, 전담직원을 두어 운영키로 하였다. <경향신문> 1975.11.25.

13) 대통령 시정 연설문을 통해 사회복지 비중을 살펴본 논의에 따르면 시정연설문의 구성은 대부분 국내외의 경제·정치·안보 등의 상황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며 금년도 시정평가부분, 차년도 시정목표와 예산을 중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제3공화국 시기에는 외교, 국방, 경제, 교육, 사회복지 순이며, 제4공화국에서는 경제, 외교, 국방, 교육, 사회복지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부분은 1978년 가장 많이 언급되었는데 이 시기는 유신헌법이 선포되고 박정희가 제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시기이다. 변경오, 『박정희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에 나타난 사회복지정책 인식에 관한 연구』, 경남대 석사학위논문, 2006.

수 있다.

4. 시민 공동체 의식 형성, 민주·자유·평등

1987년은 한국의 정치·사회사에서 ‘민주주의’ 성취, 이를 이끌어낸 ‘시민’의 힘이라는 큰 족적을 남겼다. 6월 항쟁의 시민의식은 부패하고 무능한 권력을 축출한 촛불의 힘과 맞닿아 있어 현재 ‘홀로 존재하는 개인’에 기여하고 있는 바도 크다 할 것이다. 그것은 민주주의, 평등, 자유에 기반하고 있는 자율적이고 다양한 개인의식이다. 부당한 폭력에 맞서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자신의 권리와 의무의 목소리를 내는 개인을 시민이라 말할 수 있다면 이는 몇몇 특별한 개인의 각성만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¹⁴⁾ ‘시민’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자유’, ‘평등’에 대한 자각이 전 국민적으로 확대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우선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참정권의 경우 한국은 ‘느닷없이’ 이루어졌다. 해방과 함께 한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제1조에 규정한 헌법을 갖게 되었으며, 한국 국민은 일시에 완전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국가권력이 비대해지는 동안 개인은 종속되고 국가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 1960년대 시인 김수영의 고백에서도 잘 드러나듯 ‘소시민’은 거대한 권력 기구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 머

14) 이는 4·19 혁명의 주체가 지식인, 대학생으로, 광범위한 대중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는 ‘미완의 혁명’의 이유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6월 항쟁을 이끈 새로운 정치 주체로서 시민은 말 그대로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사회적·문화적 맥락에서 탄생한 것이다. 6월 항쟁은 4·19의 정신과 박정희를 비롯해 뒤이은 군사정권의 통치력에 대응하여 개인들의 동의와 저항이 빚어진 결과인 것이다. 우리는 시민의 정의보다 역사적 과정에서 어떤 갈등을 겪고 그것을 타협해 왔는가, 타협의 주체는 어떻게 구성되었고, 그 장은 어떻게 마련해 왔는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

물려 있는, 정치적 상황에 무관심으로 일관하거나 개인적 만족을 추구하는 속물이다. 한편으로 ‘소시민’의 고백은 나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국가의 폭력이라는 것, 나는 자유인이며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50년대 후반부터 확대된 의무교육의 영향에 기인한 바가 크다.¹⁵⁾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로서 학교¹⁶⁾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7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국민 대다수가 국가기구에 포섭, 순응하는 주체로 생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 교육열이 아니더라도 자식을 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부모들의 전반적인 인식에 힘입어 민주주의, 주체성과 애국심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대될 수 있었다. 더구나 1955~63년 베이비 붐 세대가 70년대 중반부터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을 때 대학 관계 기구 역시 급증하면서¹⁷⁾ 대학생은 하나의 특수한 계층으로 그들의 문화를 향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15) 1955년 제1차 교육과정 개정 시 중등, 고등 사회 교과목의 목적은 “정치, 경제, 사회를 중심으로 하고 지리와 역사를 배경으로 하여 민주 사회의 공민적 자질을 신장하는 교과”로 규정했다. 1963년에 이루어진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민족 주체성과 경제 내용 성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1, 2차 교육과정이 공동생활을 위한 협동의 원리, 그리고 사회정의로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등 보편적인 민주사회를 위한 공민 교육이었다면 1974년 개정, 확정된 3차교육과정은 국민교육헌장이념을 토대로 국민적 자질, 민족적 주체의식이라는 ‘국적있는 교육’에 역점을 두었다.

16) 1959년 국민학교 취학률은 96.4%에 이르렀고 1976년에는 중학교 진학률 79.1%, 고교 진학률도 75.7%에 달했다. 1964년부터는 4년제 대학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17) 대학은 대부분 서울에서 생겨났다. 1967년 4년제 대학은 전국에 68개로 그 중 37개 대학이(전국 대학의 54%)가 서울에 집결해 있었다. 물론 이 시기 여자대학생은 희귀한 존재였다. 1970년대 전반 여성 중·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사람은 약 60%나 되었으며 1970년대 후반에는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약 60%였다. 1970년 고등학교 진학률은 남자 37%, 여자는 24%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당대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평균 3.4%에 불과했다.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70년대 2 : 평화시장에서 궁정동까지』, 인물과사상사, 2002, 145쪽~146쪽.

대학생들의 문화적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었던 것 역시 당대 산업화에 따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가 대량 보급된 것에 기인한 바가 크다. 대중매체가 지닌 선전적 기능을 적극 활용하는 차원에서 박정희 정권은 대중매체의 대량 보급에 만전을 기했던 것이다. 그들은 AFKN을 통해 팝과 포크 경향의 음악을 들었고,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 ‘우리식’이라는 자유분방함을 추구했다.

“이 학교가 무슨 학교인줄 아나. 이 학교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학교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학생이 감히 담배를 피울 수 있나.” (…)

“기독교 정신에 담배 피우는 것은 어긋난다고 하지만 남의 따귀를 때리는 것도 기독교 정신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뭐라구? 난 교수야. 너희들의 선생이야. 난 너희들의 철없는 짓들을 가르쳐서 옳은 길로 인도하는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원 뺨도 마저 때려 주십시오.”(중략)

갑자기 병태는 미친 듯이 학교 교정을 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다들 병태의 발작적인 뽀박질에 놀라 왜 그래? 너 왜 그래? 미쳤나 하고 물었는데 병태는 대답대신 넓은 교정을 경마장의 말처럼 뛰고 있었다. (…)

“스트리킹이다 스트리킹”

— 최인호, 『바보들의 행진』(1977), 190쪽~193쪽.

교수의 권위와 학생의 자유분방함이 충돌하는 대학에서 병태는 기성세대의 권위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대신 자신의 왼쪽 뺨을 내 놓는다는 발언으로 교수의 권위를 희화화한다. 병태의 저항방법은 ‘옷을 입고 뛰는 한국적으로 토착화된 스트리킹’이라는 특유의 명랑성으로 대응한다.¹⁸⁾ 병태에게서 국가와 민족이라는 심각함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그들의 행위는 일정한 목적이나 인과성은 없다. 다만 그의 즉각적이고 돌발적인 행위로 자신을 말한다. 이전의 대학생이 진리탐구, 정의 구현과 같은 숭고한 이미지였다면 병태와 같은 “명랑한 바보”는 보다 대중적인 대학생의 이미지이다. 읽지도 않는 책을 호주머니에 끼고 다닌다거나, 멀

18) 최은영, 『1970년대 대중소설의 ‘청년’표상 연구』, 전북대 박사학위 논문, 2017.

정한 신발의 뒤축을 일부러 눌러 신는 행위는 그들 스스로 기성세대와 구별 짓게 만든다. 대신 대학생의 스타일은 ‘고등학생, 공돌이, 공순이, 호스티스들’이 모방하면서 동시대 젊은 세대에게 ‘자유’의 아이콘이 되었다.¹⁹⁾

‘민주주의’ 교육과 대학생들의 ‘자유 의지’는 ‘평등한’ 젊은 세대라는 대중적 지지기반을 견인해 냈다. 4·19혁명이 소수 엘리트 지식인의 혁명으로 대중적 지지의 한계에 부딪혔다면 87년은 다양한 계급과 계층의 참여가 활발했고 이들을 우리는 ‘시민’이라 불렀다. 특히 노동자들은 부당한 폭력과 착취에 맞서 노동자의 권리,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해 연대했다. 특히 대학생과 노동자가 연대한 소모임은 노사문제, 노동의 역사와 노동법, 노동조합 조직·운동을 공부하며 그간 가부장적, 권위주의적으로 조직되어 온 노사관계를 평등한 관계로 전환시키며 집단적 노동자 의식을 강화했다. 박태순의 『밤길의 사람들』에서 서춘환은 87년 10월 혁명의 날 노가다가 아닌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명동의 밤길로 걸어 들어간다.

“(…) 노동자 개개인의 인간적 고민 문제 아니라 이 사회의 구조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 당면과제, 이거다하는 거예요. 학생이 민주화하던 4·19시절 지난거고, 노동자가 민주화하는 세상 된 거예요.” / “과연 그것이 우리 사회에 실현되리라 믿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요. 현실적인 상황이 그렇다는 걸 말하는 것 뿐이에요. 나야 워낙 바보라서 억울해할 줄도 모르고, 그냥 남자에게 시집가기 운동이나 벌이는 중이지만…… 민주화의 대열에서 이탈될 수 없다는 거, 온몸으로 느끼는 걸요. 아 참, 노동자의 사랑 이야기 하고 있는 중이죠? 노동자의 사랑은 아무것도 다룰 거 없어요. 인간의 사랑, 그거 라구요.”

— 박태순, 『밤길의 사람들』(1988), 282쪽.

19) 심재욱, 『최인호 문학의 명량성과 미학적 정치성 연구』, 강원대 박사학위 논문, 2017, 84쪽.

『밤길의 사람들』은 ‘노동자라는 말이 어때서?’라는 조애실의 질문에 대한 서춘환의 대답이라 할 수 있다. 서춘환은 고등학교 졸업 후 변변찮은 직업 없이 공사장을 떠돌았고 그마저 잃은 실업자 신세이다. 그는 스스로 ‘노동자’, ‘조직’, ‘노조’와는 어울리지 않는 노가다꾼, 막노동자로 여기고 있다. 조애실은 여느 여공과 마찬가지로 “남동생을 공부시키고 집에 송아지 사 보내느라 금쪽같은 청춘시절 뼈 빠지게”(245쪽) 희생한 인물이다.²⁰⁾

이 시대는 조애실의 표현으로 ‘삼백만 근로자 대표 전태일’에서 ‘일천만 노동자’로 확대된 시대이다. “어떻게 하다 보니 밑바닥 노가다”가 아니라 노동자를 비참하게 만드는 사회구조를 뜯어 고치는 것, 노동하는 그 자체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노동자에 의한 민주화이다. 조애실은 “벗어나지도 도망가지 않고 그걸 뜯어고쳐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쪽에 섰다. 그녀에게 노동 민주화의 실현 가부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사랑’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 차별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는 것이다.

계급·계층적 평등 의식은 소위 ‘넥타이 부대’라는 이름으로 금융·사무직 노동자들이 명동으로 집결하는 성과도 낳았다. 그간 양복에 넥타이를 매고 근무하는 사무직 직원들은 노동자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었지만 연대의 대상은 아니었다. 그런 그들이 학생들의 시위에 등장한 것이다. 그들은 당대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를 교육받은 세대이다. 그들은 어느 계층보다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5공화국에서 벌어진 ‘장영자 사건’같은 금융부정사기사건을 목격하면서 정권의 거짓을 판별해 낼 수 있는 엘리트들이었다.²¹⁾

20) 1970년대 노동집약적 경공업의 성장은 여성노동자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시다들’이라 불려 졌던 여성들의 노동자의식, 계급 정체성, 연대 네트워크는 이후 민주노동운동의 초석이 되었다. 구해근,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창비, 2015, 152쪽.

개인들의 계보에서 87년의 시민은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고 억압하는 국가와 대결한 개인의 결집체이다. 이들은 국가의 요구에 충실한 수동적이고 순응하는 국민을 생산하려 한 국가 권력 제도 속에서 탄생했다. 경제성장, 교육의 확대, 매체의 발전은 각계각층에서 살아가는 개인들로 하여금 민주사회, 자유와 평등이라는 인간다운 삶의 조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들의 연대를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87년 이후 민주사회의 열기는 곧 이어진 정치 권력자의 한계와 경제 위기로 인해 사그라져 버렸다. 1997년 금융위기로 인해 87년 노동투쟁으로 획득한 노동자의 권리가 다시 초국적 금융자본가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전환은 자본가, 노동자할 것 없이 '부자 되는 희망'만 갖게 되었고, 대학생 역시 살아남기 위한 스펙 경쟁 속으로 말려들어갔다.

5. 시민의 종언과 파편화된 개인

이 장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열망이 급속히 냉각되고 어떻게 해서 개인은 그렇게도 신속하게 단자화·파편화될 수 있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는 87년 혁명 주체의 '일상 부재'와 관계가 있다. '대학생'은 경제적 생산 활동을 면제받은 유일한 신분이었다. 그러나 80년대 대학생은 과거 엘리트 지식인처럼 재력가나 경제적 여유가 있는 마을 유지의 자제가 아니었다. 그들의 부모님들은 "뺨뿔 빠지게 일해서 등록금을 대주고"있었고 대학을 다닌다는 것이 경제적 안정, 혹은 대학 졸업이 미래를 보장받지 못했다. 혁명 이후 그들이 직면한 것은 경제적 무능력, 일상의 고달픔이었고, 그들은 각자 세 살 길을 찾아 자신들이 바꾸고자했던 체제 속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아내의 경제력에 의존해 살아가는 남성 지식인이 많이 등장하는 김소

21) 이상재·정일영, 『6월 항쟁과 넥타이 부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6.

진의 소설은 현실의 안정과 안녕을 택한 그들의 ‘전향’, ‘변절’에 대한 자기고백, 자기합리화가 잘 드러난다. 전임강사 자리를 얻기 위해 ‘나’는 대학발전기금으로 ‘한 장’을 준비해야 하고(『울프강의 세월』), 혁명 이후 집권여당의 거물 아버지를 둔 자식은 외교관으로(『혁명기념일』), 무능한 아버지를 둔 자식은 다시 무능한 아버지(『아버지의 자리』)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투사’, ‘혁명가’, ‘공산주의자’, ‘사회주의’는 남의 이름이었다.²²⁾ 혁명 이후 돌아온 일상에서 그들은 그들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부당한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기보다 일신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그들이 비판해마지 않았던 소시민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은 이미 모든 제도가 국가화된 상황에서 통치 권력이 그 민주적이라고 믿었던 제도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지 못했다. 관념에 지나지 않은 개인의 자유는 집단적·공동의 가치로부터 이탈하여 미시적 일상이 주류가 되게 했다. 그들의 관념적 평등의식으로는 계급적 신분을 탈피한 대신 경제적 신분관계가 다시 공고해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 시대 ‘전향’은 종래의 사상, 이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식된 민주주의, 자유, 평등의 관념에 가려졌던 그들의 일상을 직면한 것이다. 집단적 가치에 대한 회의와 이념적 공동체의 와해는 결국 체념하는 개인을 양산했고, 1990년대 후반 한국 자본주의의 대전환 과정에서 가속화되었다.

연일 ‘총체적 난국’, ‘유사 이래 최대의 위기’, ‘생존의 벼랑 끝’이라는 위기 담론이 출현하는 가운데 개인은 ‘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신을 ‘관리’, ‘경영’해야 하는 자유를 부여받았다. 알다시피 신자유주의는 모든 부

22) 철학자 윤노빈은 한국의 철학이 한국적 고통, 인류의 고통과 그 해결에 외면해 왔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를 노예가 자기의 문제보다는 ‘남의 문제’를 푸는데 몰두하는 것에 비유했다. 남의 문제를 대신해 주는 것, 엘링턴의 국립묘지의 평화를 위하여, 레닌 묘의 평화를 위하여 명치신궁의 평화를 위하여 한민족은 ‘평화스럽지 못한 야경을’ 도는 노예였던 것이다. 윤노빈, 『신생철학』, 학민사, 1989.

문에서 개인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추구한다. 모든 선택이 개인의 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이에 따른 결과, 그 책임까지 개인이 떠안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시대 개인의 자유가 국가 통치의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통치전략인 이유는 여기에 있다. 사회적 문제를 ‘자기 돌봄’, ‘자기 통치’의 문제로 전환하며 늘어나는 사회적 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개인, 사적 영역화함으로써 통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개인의 책임과 자율적 역량을 중시하는 것은 1997년 12월 30일 고시된 7차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에서도 드러난다. 교육개혁안이 지향하는 인간성은 ‘더불어 사는 인간’, ‘창조적 존재로서 즐거운 인간’, ‘개방적 존재로서 열린 인간’, ‘자율적이고 생산적인 존재로서 일하는 인간’을 제시했다. 이러한 인간상은 ‘공민’, ‘국민’, ‘시민’적 성격이 강했던 1960년대에 비해 개인적 역량²³⁾에 중점을 두고 이전 시대와 같은 교육에서의 국가의 계몽적 성격을 최소화했다.

신자유주의체제에서는 국민을 계몽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스스로 준비하고, 기획하고,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개인의 적극적인 자기 관리, 경영자적 역량을 강조함으로써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고 결정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실패에 대한 책임 역시 고스란히 개인과 가족의 몫으로 떠넘겨지게 되었다. 마거릿 대처가 시장주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사회는 없다. 개인과 가족이 있을 뿐이다”라고 했을 때, 사회적 안전장치가 되어온 복지제도를 축소하기 위한 명령이었지만 한국 사회에서 안전장치는 애초부터 오직 가족밖에 없었다.²⁴⁾ 그 사이 개인과 사회의 관

23) 수용자·학습자에 의한 수준별 교육은 학생을 교육의 소비자로 그들의 선택에 따라 학습체제가 구성될 때 공교육이 부실하게 되고 사교육의 활성화 될 것이라는 비판보다 의미 있는 지적은 이러한 교육이 학생들을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닌 능동적인 ‘경영자’로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경영자에게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교육에서 자기 경영은 자신의 창조적 능력 개발은 물론, 그 능력이 시장에서 교환가치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교육과정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구동현, 『교육과정 만들기-7차 교육과정 속의 신자유주의 통치』, 『한국사회학대회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2009, 1180쪽.

계망으로서 시민, 혹은 마을 단위의 자치 영역은 흔적조차 찾기 어렵게 되었다.

반쯤 부서진 집들이 몇 채 보이자 나는 그리로 뛰어들었다. 아무리 사람이 버리고 간 집이지만 똥 놀 곳이 마땅치 않았다. 얼마 전만 해도 밥 먹고 잠자던 부엌이나 방이라고 생각하니 선뜻 바지춤을 꺼내릴 수가 없었다. 잠시 주춤거리는 새에 마침 세로로 절반쯤 깨진 큼직한 항아리가 눈에 띄었다. 그 안에는 아마 그 항아리의 반을 깨고 들어왔을 한 뼉짜리 벽돌이 들어있었다. 크기로 봐서는 한 열 명쯤 되는 식구는 좋아 먹여 살렸을 장독 같았다. (…)

아아. 하지만 여태껏 나를 지탱해왔던 기억, 그 기억을 지탱해온 육체인 이 산동네가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를 이렇게 감상적으로 만드는 게. 이 동네가 포크레인의 날카로운 삽질에 깔려가면 내 허약한 기억도 송두리째 파내어질 것이다. 그런데 나는 기껏 똥을 놀 뿐인데…… 그것밖에 할 일이 없는데…… -김소진,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1997), 33쪽.

항아리 크기로 봐서 열 명쯤 되는 그 식구는 어디로 갔는가. 한 지붕에 살았던 장석조네 아홉 가구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술주정뱅이 고물장수 순심이 아버지, 구둣집 문간방에 살던 효상이, ‘나’가 겨울날 밤 찐지단지를 깨고는 바로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루종일 떠돌아다니다 마을에 들어섰을 때 짐짓 모른 척 해준 아주머니들, ‘나’가 깐 항아리 주인 육쟁이 함경도 할머니. 포크레인 삽질에 깔려나갈 산동네와 함께 “내 허약한 기억”도 사라질 것이다. ‘나’를 감상적으로 만드는 것은 사라

24) 가족위기, 가족해체 담론은 경제위기 상황과 맞물려 집중조명되었다. 이러한 위기담론은 고정된 성별분업에 기반을 둔 가부장적 가족의 가치를 옹호하는 정치성을 띠고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제 많은 여성노동자가 해고되고 비정규직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관심은 가족 부양자로 인식되어온 기혼남성의 해고에 집중되었다. IMF 전후 부권 위기 담론은 바로 가족, 부권이 우리 사회의 주요한 물적 토대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박소진, 『‘자기관리’와 ‘가족경영’ 시대의 불안한 삶』, 『경제와 사회』 제84호, 비판사회학회, 2009, 24쪽.

진 과거에 대한 아련한 추억이나 향수가 아니다. ‘나를 지탱해 왔던 기억’, ‘나의 기억을 지탱해온 육체인 이 산동네’가 허물어지는 상황에서 내가, 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일 것이다.

‘나를 기억하는 것’, 즉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있고, 내가 누군가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다. 설령 내가 삶을 놓고 싶을 때조차도 나를 기억하는 ‘그들’로 인해 내가 행동하는 것을 조심하고, 내 행동을 반추할 수 있는 거울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인간다울 수 있다. (산)동네 공동체는 거주함으로써 서로의 기억이 된다. 즉 거주한다는 것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현재 오래된 작은 집들, 산언덕에 이룬 동네가 재개발되고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이는 단지 새 아파트가 들어섰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헌 집’을 허물고 ‘새 아파트’가 가져다 줄 경제적 이익에 대한 기대는 그것이 가난한 원주민에게 돌아갈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언제나 ‘옳은 일’이었다. 재개발은 ‘도시의 균형 발전’ 및 ‘주거생활의 질’ 혹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도시미관’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된다. 삶의 질을 결정하는 지표가 ‘국민’, ‘미관’, ‘발전’으로 그 어디에도 그 곳에서 거주할 개인의 의지는 없다. 이제 어디에도 ‘거주함으로써 존재, 공동체에 정착해 살아가고 일상을 만들며 뿌리를 내릴 집’²⁵⁾은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들 역시 더 큰 이익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삶의 터전을 옮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노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유연한 고용체제는 사람들이 한 노동현장에 오래 머물기를 바라지 않는다. 순수하게 홀로 선 개인은 노동·주거 등 일상을 살기 위해 필요로 하는 공동의 문제 해결 능력을 박탈당한 채 고통을 오롯이 홀로 감내하도록 내버려진 존재들이다.

‘순수 개인’은 국가 권력이 거대화되는 과정에서 탄생했다. 특히 한국

25) 오정진, 『재개발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 53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306쪽.

의 권위주의적 통치체제는 생활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온 개개인을 호명하며 통치했다. 복지제도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상호부조와 같은 자치제도를 국가화 할 때 개인은 자신의 안전을 제 이웃이 아닌 오직 국가에 의존했다. 관념적인 이념에 의한 공동체는 대중적 참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변, 일상과 괴리됨으로써 지속적인 연대의 기반을 구축하지 못했고 신자유주의 시대의 자기 통치술은 고통의 개인화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한편 국가 제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민주’, ‘자유’, ‘평등’과 같은 민주 사회의 구성 원리를 자각하게 했고, 민중, 시민이라는 공동체적 역량을 가능하게 했다. 민주 사회의 이념은 다양하고 다원적인 개인 정체성의 기반이 된다. 이번 촛불 시위는 타인의 정체성을 경원시하지 않고 ‘함께 있음’, 자신이 여러 정체성들 ‘사이’에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정한, 고정적인 정체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항하는 정체성으로 ‘만들기’를 시도한 것이다. 근대화, 신자유주의 시대를 통해 구성된 ‘홀로된 개인’의 가능성은 여기에 있다. 새로운 공동체는 ‘순수하게 홀로 존재하는’, 결코 단일하지 않은 이들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소설

- 김소진, 『눈사람 속의 검은 향아리』, 『눈사람 속의 검은 향아리』, 강, 1997.
- , 『처용단장』, 『열린 사회와 그 적들』, 숲, 1994.
- 박태순, 『독가촌풍경』(1977), 『한국소설대계』 동아출판사, 1995.
- , 『밤길의 사람들』(1988), 『20세기 한국소설』, 창비, 2007.
- 최인호, 『바보들의 행진』, 예문관, 1977.

2. 단행본 및 논문

-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70년대 2 : 평화시장에서 궁정동까지』, 인물과사상사, 2002.
- 강필구, 『일제전시체제기 조선인 강제동원 실태 분석』, 계명대 석사학위 논문, 2013.
- 구동현, 『교육과정 만들기-7차 교육과정 속의 신자유주의 통치』, 『한국사회학대회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2009, 1175쪽~1185쪽.
- 구해근,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창비, 2015.
- 김성일, 『광장정치의 동학』, 『문화과학』 89호, 문화과학사, 2017, 146쪽~168쪽.
- 박명규, 『국민·인민·시민』, 소화, 2009.
- 박소진, 『“자기관리”와 “가족경영” 시대의 불안한 삶』, 『경제와 사회』 제84호, 비판사회학회, 2009, 12쪽~39쪽.
- 변경오, 『박정희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에 나타난 사회복지정책 인식에 관한 연구』, 경남대 석사학위논문, 2006.
- 심재욱, 『최인호 문학의 명랑성과 미학적 정치성 연구』, 강원대 박사학

위 논문, 2017.

오정진, 「재개발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 53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291쪽~311쪽.

오창현, 「한국농촌공동체의 구성원리」, 서울대석사학위 논문, 2005.

윤노빈, 『신생철학』, 학민사, 1989.

윤해동, 『지배와 자치』, 역사와비평사, 2006.

이상재 · 정일영, 『6월 항쟁과 넥타이 부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6.

이영학, 「일제의 토지조사사업과 기록관리」, 『역사문화연구』 제30집, 2008, 119쪽~152쪽.

정상호, 「시민(citizen)과 시민권(citizenship)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1987년 6월 민주항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학술토론회 자료집』, 2007, 79쪽~98쪽.

최원식 · 임규찬 엮음, 『4월혁명과 한국문학』, 창작과비평사, 2002.

최은영, 「1970년대 대중소설의 ‘청년’표상 연구」, 전북대 박사학위 논문, 2017.

표영수, 「일제강점기 육군특별지원병제도와 조선인 강제동원」,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79집, 2014, 95쪽~138쪽.

지그문트 바우만, 이일수 역, 『액체근대』, 강, 2009.

앤드루 고든, 김우영 외 옮김, 『현대 일본의 역사 1』, 이산, 2015.

<Abstract>

Lonely Beings in an Enormous Nation, and the Community

Kim, Ok-Sun*

Individuals that are possessing a same space to express their opinions on political matters are defined as the general public or citizens. In the Winter of 2016, it was the 'sovereigns' who came out to the street to recover the trust of representative democracy when it lost all faith of people. The society is expecting a new agent to lead the democracy of our society.

The new agent who came out to the square was 'isolated public' that had been called as Sampo · Opo. Also, during this period, the demonstration included many family-unit participants. These are 'individuals' who actively linked their daily lives with an enormous discourse such as impeachment. However, in these day, we can request for resolving the issues as individuals and the only counterpart of individuals is the nation.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ality where only individuals and nation are left in the society through historical moments of government making interventions in individuals and communities.

Chapter II examines how Japanese forces ruled Joseon people by luring the self-regulating organizations of Joseon people into their authority. Chapter III covers the creation of 'compliant people' based

* KyungSung University

on administrative, educational and media systems reorganized in the modernization process and chapter IV examines the features of revolution that had been created by the system producing those compliant people. Chapter V deals with economic crisis, scattered individuals by losing the power of community after shift into neoliberalism, family as the minimal safety net, and traces of disappeared communities.

Followed by political · economical changes of Korean society, the government has been interfering with individuals and communities with diverse methods. The government made people realize the ideology of a democratic society such as ‘democracy’, ‘freedom’, and ‘equality’, and it created the capabilities as a community. The ideologies of a democratic society are the basis of diverse and multi-dimensional identities of an individual. ‘Pure individuals’ have been scattered in the process of government power becoming enormous, but they cannot be persuaded by a single power. The new community should find possibilities from them.

Key Words : Individual, Community, Citizen, Nation, Authoritarian nation, Neoliberalism, Pure individual

■ 논문접수 : 2017년 11월 17일

■ 심사완료 : 2017년 12월 8일

■ 게재확정 : 2017년 12월 18일